

[산업경제]

지방투자보조금,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확 바뀐다 -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

앞으로는 투자는 많이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법」을 제정한다.

- 그동안 투자에 한해서 지원되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창출 모두를 함께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의 보조금 신청기업은 신청서와 작성한 고용계획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과 지원 금액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고용물량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전액 환수 될 수 있게 된다.
- 보조금 지원과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역 관공공체 예산을 위한 사회적 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의해 지역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동안 수도권에서 한 지역에 투자해 있어 기업유치가 어려워진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게 했다.
- ※ 지원 제외지역에 대해 특히 적용되는 한 지역 지원 예산 50% 추가지원
- ※ 지원 제외지역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전북
- 이런 제외지역으로 기업 활동에서는 수도권 일대 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수도권에서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에 투자해 활동에서도 금의 지원 비율이 높아 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조금의 투자지원 금액을 예산에서 한 지역 관공공체 예산에서 소자를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 투자금 예산은 제도 등을 도입할 결과, 고산 보조금 지원의 지역지원 지역에도 보조금이 관공공체 지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지원 금액(10~11, 억 원) : 부산(1~10, 억), 광주(1~10, 억), 대구(1~10, 억), 경북(1~10, 억)

○ 그러나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한 보조금 집중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금번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충남·충북·강원 집중률 : ('10)57.5% → ('11)40.7%

○ 또한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투자유치 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방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낮은 지원 비율을 적용해 왔다.

○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전기업 지원			신증설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 투자(5%)	입지(20%) 투자(7%)	입지(40%) 투자(10%)	투자(7%)	투자(10%)

* 기업의 부지매입 비용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원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지역의 산업입지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지역별 기업 인센티브 적용은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지역적 산업기반과 산업적 특성에 맞는 기업의 유치를 위한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조자료 : 지방투자보조금(지식경제부 1, 25.)

작성 : 임형빈(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문의 : 041-840-1164 (hbyim@cdi.re.kr)